

데스크 시각



정후식 편집부국장

한 시장 후보자가 고성을 지르며 거리 유세를 하고 있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이 시에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듣고 있던 한 시민이 말했다. “우리 시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러자 후보자는 목소리를 높여 더 크게 말했다. “그럼 강부터 먼저 파겠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상에서 회자됐던 풍자다.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한 선거 출마자들의 뛰는 공약은 실전에서도 흥미진진하다. 허황될수록 더욱 빛을 발하기도 한다.

17대 대선 당시 허경영 경제공화당 후보는 ‘결혼 수당 1억 원, 출산 수당 3000만 원 지원’ ‘60세 이상 노인 매월 건국수당 70만 원 지급’ ‘정당제도 폐지’ 등을 내걸었다. 기발함(?) 덕분에 그는 인터넷상에서 ‘허보좌’로 불리며 상승가를 쳤다. 투표에서도 9

참공약, 막공약, 헛공약

만6756표를 얻어 이인제 후보(16만708표)의 뒤를 이으며 선전했다.

삼선개헌 이후 직접 선거로 치러진 7대 대선에서는 카이저수염으로 유명세를 탄 정의당 진북기 후보가 “신안 앞바다에 보물 이 있다. 이걸 캐내서 온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등의 공약으로 12만2914표를 얻어 박정희·김대중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공약(空約)된 공약(公約)들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 군소후보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14대 대선 때 정주영 후보는 아파트 반값공급 등을 내세워 16.3%의 득표율을 올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쌀개방 저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농가부채 탕감’, 이명박 전 대통령은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 ‘반값등록금’을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가깝게는 박근혜 대통령도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 경제민주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약 후퇴 논란을 부르고 있다. 표만을 의식해 마구잡이로 내건 ‘막공약’들이 당선 이후에는 지키지도 못할 헛공약이 된 것이다.

대통령 선거의 학습효과일까.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도 장밋빛 공약들이 홍수를 이룬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가 최근 발표한 ‘민선 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임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2283개 중 완료된 것은 24.7%,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것은 52.1%였다.

이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470조여 원으로 대통령 공약보다 135조 원이 더 많았다. 여기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도 교육감 공약까지 포함하면 10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예비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뜨겁다. 선거 레이스 초반 여야의 공약에 민심을 파고들기에 용이한 복지·교육 분야를 겨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르신 무료 독감 예방접종과 20~30대 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지방대출신 공공기관 채용 의무화 등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교통비 및 통신비 경감,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생활임금제 등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광주·전남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도 의제 선점을 위한 공약들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전남지사 선거에선 교통복지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버스공영제’와 ‘100원 택시’, ‘여객선공영제’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은 ‘시민참여 행정’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다행인 것은 과거와 달리 대형 개발을 앞세운 토건 공약보다 생활밀착형이 많은 점이다.

실천 로드맵 검증 받아야

반면 광주시·전남도선관위와 광주·전남 메니페스토추진협의회가 지방선거 10대 어젠다로 제시한 재정자립도 개선, 지역간 균형을 이루는 도시재생, 복지재정 확충 등에 대한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호남고속철도와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등 올해 완공되는 광주·전남 3대 역사(役事)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제시도 미약하다. F1대회나 지역광장 문제 등 민감한 지역현안도 외면받고 있다.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후보들의 정책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남은 기간 유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목표와 우선 순위, 추진 일정,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유권자들도 헛된 공약에 현혹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성부터 검증해봐야 한다. 지자체 삼림살이를 아부에게나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who@kwangju.co.kr

은펜클럽



송민석 국립대학법인 UNIST 위촉임학사정관

‘러브인 아시아’의 잔잔한 감동

가끔 아내와 마트에 들르는 날이면 동반자에서 온 며느리를 서너 명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쇼핑하는 모습들을 본다. 그중에서도 월남에서 온듯한 며느리들을 보면 더욱 정감이 간다. 짧은 날 월남전에 참전해 그들과 접촉하면서 예절 바른 민족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요즘 농촌 총각의 40%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은 피할 수 없는 추세다.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까지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이 많은 사회적 역할은 무척 크다.

정부는 20년 후 한국농촌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우리 농촌을 지킬 다문화가정 2세대를 위한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영농교육을 통하여 농업 CEO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도 많은 지자체부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다문화축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문화 축제는 그들의 문화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를 모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우리 문화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모범적인 다문화 가정의 사례를 발굴하여 다문화 축제장에서 표창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응력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는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체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의 경우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각 나라말로 숫자 세는 법을 함께 배우기도 하고, 여러 나라 전통 의상을 입어보거나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보는 등 문화 다양성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잘 발달해 있다고 한다.

지난해 연말 뉴욕에서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교포 한 분을 만났다. 2, 30년쯤 지나면 한국 이민자 자녀 중에서도 미국 대통령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당차게 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수많은 결혼이주여성도 이주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차별과 편견 속에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한국 사회의 불행이며 손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란 신화에 갇혀 세계에서 화교가 뿌리내리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소리를 들어왔

다. 해외로 이주해간 우리 동포가 7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세계인들이 한울타리 안에서 공존하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재외 교포들이 경험했던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되풀이해선 안 될 일이다.

그들은 소위 한국인들이 꺼리는 기피 업종에 종사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나아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는 데 이바지한 것도 사실이다. 2개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다.

이제 시대착오적인 차별문화에서 벗어나 때가 됐다. 백인과 흑인, 동남아인 등 출신 국가에 따른 이중적 잣대는 하루빨리 벗어 던져야 한다.

한 국가의 품위는 배려와 포용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기 때문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세계 시민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식이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우리도서관에 놀러오세요



조정희 광주시립도서관장

한권 읽으시는 건 어퍼신지요.

평생을 도서관 사서로 근무한 저에게 독서를 권하는 것은 사명감과 같은 일입니다. 한권의 책은 지혜의 깊이를 더해 주고, 마음에 위안을 주기도 하며,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독서야말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이라 확신합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로 조선 중기의 시인 백곡(柏谷) 김득신의 일대기를 들 수 있습니다. 김득신은 조선 최고의 독서가로 한권의 책을 10만번 이상 읽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김득신은 본래 머리가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1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글을 배웠는데, 처음으로 배운 ‘십구사략’의 첫 단락인 26자를 사흘간 배우고도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득신을 가능성 없는 사람이라 여겼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다. 그는 자신의 기억력이 남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는 책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그

가 기록한 독수기(讀數記)에는 평생동안 1만번 이상 읽은 글 36권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독서에 정진한 끝에 김득신은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존경받게 됩니다. 독서가 이루어낸 마법과도 같은 일입니다.

도서관은 이러한 독서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시민 모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서재’입니다. 저는 광주 시민들 모두가 도서관을 통해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는 ‘도서관주간’입니다. 올해로 50번째를 맞는 도서관주간은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도서관! 세상과의 평생소통, 미래와의 설레는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도서관주간에 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무등도서관에서는 봄과 관련된 시

낭송 및 시에 투영된 인생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인과 함께하는 봄날 스캐치’ 행사,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포스터 전시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직도서관에서는 ‘독서클러키? 책 속에서 만나는 마음치유’를 열고 정신건강, 마음의 상처 치유 등을 주제로 하는 도서를 전시하며 동극놀이, DVD 상영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산수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늑대가 들려주는 새로운 아기돼지 이야기’ 패넌시어터 공연과 중국 전래동화 구연 등 8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이용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광주시민들이 책으로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도서관주간’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독서란지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따라서도 포근한 봄날, 도서관에 오셔서 여러분의 세근으로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社說

거리의 무법자 ‘대포차’ 단속 더 강화해야

대포차 1500여 대를 시중에 유통한 업자 47명과 대포차를 구입해 타고다닌 163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자동차 매매상사 업체들은 판매용으로 내놓은 차량 1555대를 명의 이전 없이 할증에 팔아 대포차로 구입자들은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버젓이 운행해왔다고 한다.

당부 서부경찰은 8일 자동차 매매상사들이 담포 대출로 사채업자들이 확보한 차량을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 후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받고, 대포차를 대량 유통한 다음 폐업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매매상사가 폐업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회사 명의 차량이 대포차로 시중에 유통돼 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포차 구입자들은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하고 각종 범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매매상으로부터 대포차량을 구입한 한 의 국민은 광주시 광산구에서 사람을 치고 도주해 수배 중이지만 신원을 알 수 없

어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1555대의 대포차량 중 무작위로 100여 대를 뽑아 조사한 결과,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만 1억3000여만 원에 달했다. 대포차 운행자 가운데 25%가량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 보험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보험사들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 편법으로 보험에 가입해 사고 처리 등의 혜택도 누렸다.

대포차는 무적(無籍)차량으로, 거리의 흥기와 다름 바 없다. 사고를 내도 대부분 피해자가 배상받기 어렵고 뺑소니라도 친다면 피해 배상은커녕 그 추적조차 쉽지 않다. 이런 대포차가 광주에서 서만 출몰아 5000여 대 이상이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수사를 더욱 확대해 국가적 손실은 물론,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는 대포차를 뿌리뽑아야 한다. 또 관련자들에게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남지역 아파트 난립, 지자체는 뭘 하나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관이 잘 보존된 전남지역 시·군까지 고층 아파트 뒤덮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건축행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여수·순천·광양 등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8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속속 허가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경관이나 일조권 등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돼 업체들이 중소도시로 눈길을 돌려서 빛어지는 ‘풍선 효과’인 셈이다.

여기에서 시장·군수들이 인구 유입 명분을 내세우면서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도 난립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부분 군 단위 시가지 경관은 야트막한 사설이나 낮은 건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수익률을 높이려는 업체와 지적을 앞세운 단체장의 ‘욕심’이 맞물려 볼품없는 키다리 아파트가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의 무계획 도시행정도 부조화

경관을 거둬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순천시, 광양시 등에서 제출한 아파트 단지 조성 안건 모두를 사실상 업무의 편에 서서 조건부로 의결했다. 순천 생태하천인 동천 주변의 18층 아파트, 광양 마출지구 24층 아파트 개발의 조건 부 허가가 대표적이다.

전남은 자타가 인정하는 생태도시, 경관 비교우위 지역이다. 따라서 대단위 건축도 주변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높이와 규모, 전체적인 형태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야만 계속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

앞으로 전남도는 일정한 기준의 ‘경관 설계’조례를 제정해 운용함으로써 고층 아파트 및 대형 구조물의 난립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풍치를 살리면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과 빼어난 경관 유지도 가능한 것이다. 전남도는 눈앞의 명분에만 급급하지 말고 세련되고 현명한 건축행정을 펴기 바란다.

無等鼓

알베르 카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 ‘이방인’은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 명작이지만 난해한 것으로도 이름이 높다. 카뮈가 등장시킨 ‘부조리’라는 개념도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주인공 피르소가 ‘태양 때문에’ 이방인에게 총을 쏘았다고 밝혀지는 부분은 종종 독자들을 곤혹스럽게 해왔다.

다행히 최근 이정서씨가 새 번역본을 내놓으면서 “독자들이 이 책을 어려워 하는 이유가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제가 된 피르소가 ‘진실’에 얽매는 권위에 기대어 ‘진실’로 둔갑한 대의적인 경우다.

한국 검찰도 ‘서을유에 대해서’는 ‘강철 단검에서 반사되어 눈을 후벼파는 빛의 칼날 때문’이라며 기존 번역본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 씨의 주장이 맞다면 책 읽기가 한결 쉬워진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번역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인데다 오역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아 어떤 해석을 받아들여느냐는 독자 개개인의 선택일 터다.

하지만, 이 씨의 주장에 새삼 눈길이 가는 것은, 그가 “국내 최고의 카뮈 전문가인 번역자의 권위에 짓눌려 독자들이 잘못된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

고 밝힌 부분 때문이다. 현재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카뮈의 ‘이방인’은 카뮈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불리는 김화영 고려대 명예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이 씨에 따르면, ‘전문가의 말이니 당연히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심을 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이 같은 사례를 무수히 찾아볼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 자신의 생각과 유행을 전담한 일부 신학자와 과학자들이 주장한 천동설은 ‘거짓’이 ‘진문가’라는 권위에 기대어 ‘진실’로 둔갑한 대표적인 경우다.

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증거라며 국정원이 내놓은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내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았기에 비롯된 일이다.

에나 지금이나 전문가의 견해라거나 상식,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된 ‘권위’에 짓눌려 진실이 감춰지거나, 진실을 알려는 노력을 포기한 경우가 한 둘이었겠는가. 가짜뉴스, ‘진짜’로 믿어왔던 것들이 정말 진짜인지 궁금해진다.

/홍행기경제부재 redplane@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대책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